

금융자율화에 따른 산업금융의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수호**

< 목 차 >

I. 서언	IV. 금융자율화와 산업금융
II. 산업금융의 의의 및 기능	1) 금융자율화의 의의
1) 산업금융의 의의	2) 금융자율화하의 산업금융
2) 산업금융의 기능	3) 동태적 비교우위의 확보
III. 산업금융의 추이 및 효과	4) 한계부문에 대한 지원
1) 산업금융의 추이	V. 산업금융의 정책방향
2) 산업금융의 효과	1) 산업금융제도의 개편
	2) 산업금융을 위한 금융시장 육성
	VI. 결론

I. 서 언

우리나라의 산업금융¹⁾제도는 초기의 경제개발단계에 있어서는 부족한 재원의 전략산업에로의 집중적인 배분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구조고도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산업금융제도의 강화과정을 거쳐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게 됨으로써 금융산업의 저발전이 초래되고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에 비해 낙후된 산업으로 전략하게 되었던 것이다.

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낙후성에 관한 문제제기로부터 금융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졌다. 그리고 자율화과정에 대한 각종 계획이 수립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졌다. 금융자율화는 크게 금융기관의 민영화, 금융규제철폐, 금융시장개방 및 금융혁신이라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 본 논문은 본교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음.

** 본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경제학 박사(화폐금융론)

1) 여기서 산업금융이라 함은 정책금융중 제조업에 배분되어지는 정책자금을 의미한다.
이영세, 이수호, 김동환, 산업금융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KIET, 1989, P.187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정부보유은행주식매각을 통한 금융기관경영의 자율성회복, 중앙은행의 독립성확보, 금리자유화, 외환·자본자유화, 업무영역조정,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영의 자율화 등의 중점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형태로 계획되어졌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강력하게 수행되어오던 정책금융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축소 내지 폐지가 은행의 대출자금배분자유화의 관점에서 주장되어졌다. 실제로 금융자유화는, 금융산업에 있어 정부개입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회복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에의 정부개입의 한 형태인 정책금융, 즉 산업금융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금융제도가 경제발전과정에 미친 영향이 크고 금융자유화과정에서 이러한 기능이 시장을 통해 대체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금융의 조정문제는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산업금융을 위한 금융시장육성이라는 대안을 점진적으로 실행해가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금융자율화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자율화가 이루어진 금융산업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실패들²⁾ 보완하기 위해서는 산업금융이 부분적으로 존속되어 그 기능을 발휘해야할 필요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개발 등을 통한 동태적 비교우위확보, 지역개발·환경보전·중소기업지원 등의 한계부문에 대한 지원, 금융산업의 정보비대칭성·도산가능성·외부경제효과등의 해소를 위해 산업금융제도가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산업금융이라고 하는 정부개입과 금융자율화라고 하는 시장기능의 확대과정의 병행적 운용방안이 금융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게 된다. 즉,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자유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하며 그 과정에서 산업금융은 어떠한 형태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향후 금융산업고도화정책의 추진에 있어 주요 논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금융자율화과정에서의 산업금융 조정방안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발전전략의 이론적 기반위에서 시행되었던 우리나라의 산업금융정책이 실제로 산업부문간에 걸쳐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실제 그 효과는 어떠한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산업금융정책의 현실적 타당성을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금융제도의 추이 및 산업금융정책 시행과정을 재원별·목적별로 나누어 고찰해보고 산업별 산업금융의 배분구조와 산업금융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산업금융 중에서도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되었던 장기설비자금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져 산업발전에 기여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금융자율화의 추진과정을 고찰하고 자율화에서의 산업금융의 필요성을 고찰해 본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산업금융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산업금융조정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과제라 할 수 있는 산업금융을 위한 금융시장 특히 장기자금시장의 육성방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손상호, 금융자율화시대의 산업금융, 산업연구원, 1994.4. pp. 122-125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전개서, pp. 4-7

II. 산업금융의 의의 및 기능

1) 산업금융의 의의

(1) 산업정책과 산업금융

산업금융이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부문에 대해 신용비용과 신용가용도측면에서 우대조건으로 지원되는 금융인 정책금융 중에서 제조업 부문에 배분된 금융지원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금융은 정책금융의 일부분이며 동시에 제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정착되기 시작한 개념이고³⁾, 각 국민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각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시장경쟁과정 이전에 신기술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정책적 시도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화·개발전략 및 무역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산업정책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

- i) 자원·노동공급 및 자본축적의 증가, 기술의 개발, 산업발전의 촉진, 생산요소이동의 개선 및 적응능력의 개선등을 통하여 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을 증대시키는 정부의 명시적 정책. (Adams, F.G. & Klein, L.R)
- ii) 거시경제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산업의 효율성제고와 성장을 도모하는 제반 정책적 조치. (OECD)
- iii) 총체적인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경제내의 여러 산업을 발전 또는 축소시킴을 의도하는 정부의 정책 (Johnson, C.)
- iv) 경쟁적 시장기구가 갖는 결함-시장실패-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해서는 자원배분 혹은 소득분배 상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 혹은 부문간의 자원배분 또는 개별산업의 산업조직에 개입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 (동경대)
- v) 거시경제의 집계변수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통화·재정정책 이외의 수단으로 생산과 자원배분의 일반적 메카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 (Lindbeck, A.)
- vi) 산업간 자원배분의 변화와 각 산업내에 있는 민간기업들의 특정한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Komiya)
- vii) 기업활동을 구제화시키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표현(Leone, R.R. & Bradley, S.C.).

3) 산업정책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서구의 경우, 1971년 OECD의 보고서 "Industry Policy of 14 Member Countries"이다.

4) 이영세 외, 산업금융정책의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1987, P 14.
이경태,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산업연구원, 1991, P 4. 참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산업정책이란 국민경제의 성장과 산업구조를 최적상태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에 대한 지원·조정·규제를 통해 가해지는 일체의 정책적 개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이 경제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은, 첫째 완전경쟁적 시장기구에 대한 회의와 시장실패의 존재, 둘째, 국제경쟁력양성을 위한 동태적 비교우위의 확보필요성, 셋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조정을 통한 사회후생 증대의 실현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을 위한 시장개입은 크게 재정적 수단과 금융적 수단의 두가지 형태를 띤다. 각 수단은 장·단점이 있으나 금융적 수단은 정부예산면에서 큰 부담이 없고, 정책집행과정에서 경제계층간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작다.⁵⁾ 그리고 금융정책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신용어베 일러빌리티와 신용비용등의 조정을 통한 민간투자예의 영향이란 면에서 볼 때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금융정책은 보다 높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산업금융정책의 정당화 근거는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첫째,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차선책으로서의 산업정책 수행의 수단으로서 금융적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시장 고유의 문제로서, 금융시장이 불완전하여 시장실패를 야기하게 될 때, 이의 보정책으로서 산업금융정책이 금융시장에 대한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⁶⁾ 즉 전통적 금융정책이 금융시장의 실패로 인해 최적의 신용배분을 가져오지 못할 때 그에 대한 보완으로서 선별적 성격을 지니는 산업금융정책이 차선의 정책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⁷⁾.

여기서 금융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자금수급의 불균형과 금리의 조절기능의 제약, 금융시장의 정보모집과 처리능력의 부족등을 들 수 있다. 즉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대규모 설비자금, 위험부담이 높은 모험사업, 국민경제의 동태적 관점에서 중요한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등에 대한 자원배분이 금융시장에서 회피될 때, 금융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산업금융정책이 차선책으로 요구되게 된다.

(2) 산업금융정책의 특성

산업금융정책은 금융정책의 범주내에서 선택적신용통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적 신용통제는 정책당국이 경제의 특정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억제 또는 촉진하고자 신용의 배분에 개별적·차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신용의 질적 통제(qualitative control)를 뜻한다. 즉 선택적 신용통제란 경제적·정치적 독단을 통한 금융시장의 거래에 대한 간섭을 뜻하며, 일반적 통화정책과는 그것이 내포하는 차별적 성격으로 구분되는 대부자와 차입자에 대한 제조치를 뜻한다.⁸⁾

5) 물론 정책대상부문에 대한 통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資金轉用으로 인한 政策效果의 漏出이라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6) Mckinnon, R.I., "Financial Policies", Policies for Industrial Progressive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 Press, 1980, pp. 93-120. 참조
Mckinnon의 논의는 개도국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은 동태적 시장실패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화시킬 수 있다.

7) 선별적 신용정책이론도 이런 의미에서 산업금융정책이론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적 신용통제는 크게 경제의 안정과 특정부문의 육성·개발이라는 두가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된다. 첫째, 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선택적 통제는 일반적 금융정책의 결과로 특정부문이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받는 경우 그것을 중화하기 위해 취하는 선별적 통제정책을 말한다. 이는 주로 선진국에서 통화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부문에 있어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려는 소극적·방어적 목적의 정책으로 나타난다. 둘째, 특정부문의 육성·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택적 통제는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위해서 전략산업부문에 대한 신용의 효과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공격적 목적의 신용통제를 말한다. 그 예로서 중소기업과 수출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용자나 중화학공업·기계공업육성을 위한 특별대출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개발전략의 추진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선택적 신용정책이 갖는 목적은⁹⁾ 첫째, 투자규모의 방대함과 위험성 및 회임기간의 장기적 성격으로 인해 상업금융기능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생산부문에 방대하고 조건이 유리한 중장기 신용을 공급하는 것, 둘째, 개발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후부문의 지원을 통해 급격한 산업구조조정 of 충격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등이다.

2) 산업금융의 기능

(1)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금융정책

산업금융의 대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와 금융구조의 성격에 따라 각기 상이하며 또한 일국의 경제구조가 변천함에 따라 그 유형도 달라진다.

개도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인 초과수요상태가 존재하게 되고, 가격변수인 금리의 수급조정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금배분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업화를 위한 유치산업의 육성 및 보호의 측면에서도 유치산업의 미래수익흐름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유치산업의 동태적 외부효과가 고려되지 못할 때 금융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도국의 산업금융정책이 취해지게 되는데, 개도국의 경우 국내산업기반형성과 공업화가 주요한 산업정책의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산업금융정책도 개발금융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개도국의 개발금융정책에서는 정부의 개발정책목표에 따라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투융자활동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된다¹⁰⁾.

개발금융정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적 제약조건하에서 경제개발목표의 추진이라는 산업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하와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전개된다.

- i) 전통적 금융기능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한 금융기법의 혁신도모.
- ii) 개발정책에 필요한 신용의 적절한 공급
- iii) 위와 관련된 신용을 공급하는 특수 기능 또는 전문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의 설립 및 육성

8) Kane, E.J., 1977.

9) Partel, I.G., 1980.

10)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금융산업발전과 개발금융의 전개방향, 1986. P5. 참조

지원.

iv) 기존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저축동원능력의 제고 및 지원.

v) 민간투자자와 경제성장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관한 정부정책방향의 제시¹¹⁾.

결국 개발금융정책은 기간산업 및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의 제공 등 경제개발에 관련된 산업기반확립에 주된 목적이 두어진다. 따라서 개발금융정책은 자금공급의 도관(conduit)이라기 보다는 촉매(catalyst)역할에 집중되고¹²⁾, 조정자라기 보다는 개척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요추종적(demand - following)금융이라기 보다는 공급선도적(supply-leading)금융의 성격을 갖는다¹³⁾.

그리고 경제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면 개발금융은 개발자금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급선도적 기능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의 발전에 부응하여 금융수요의 변화에 대처해야하는 수요추종적 기능을 병행해 나간다. 산업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성장이 부진한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촉매(catalyst)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진다.¹⁴⁾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발금융은 산업구조고도화와 국제 경쟁력향상에 의한 비교우위의 확보,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 후생의 증대등에 목표를 두게 되는 것이다.¹⁵⁾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기이후에 개발금융의 중점이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이용효율화, 장기발전기반으로 되는 기술개발 및 지식집약화, 바람직한 생활환경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

(2) 산업금융의 수단과 효과

일반적으로 대부자, 차입자, 신용수단에 대한 선택적 신용정책의 수단을 분류해보면¹⁶⁾, 우선 대부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자산구성규제(일정비율로 특정부문 자산보유를 규정), 특정부문 대출정도에 따라 차별적 기준을 또는 할인을 부과, 특정부문 대출시 정부의 보증 등의 수단이 있다. 차입자, 즉 특정기업 또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자보조금 지급, 신용어베일러블리티면에서의 우대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신용수단을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최고이자율규제와 지원대상·대출조건규제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선별적 신용통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신용통제가 가격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각각 다른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¹⁷⁾

11) Brimmer, A.F., "Central Bank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cord of Innovation", J.M.C.B., Vol.3, 1971. 참조.

12) Kane, J., Development Banking, Lexington Books, 1975, pp. 32-44.

13) Patrick, H.T.,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14, No. 2, Jan. 1966, pp. 174-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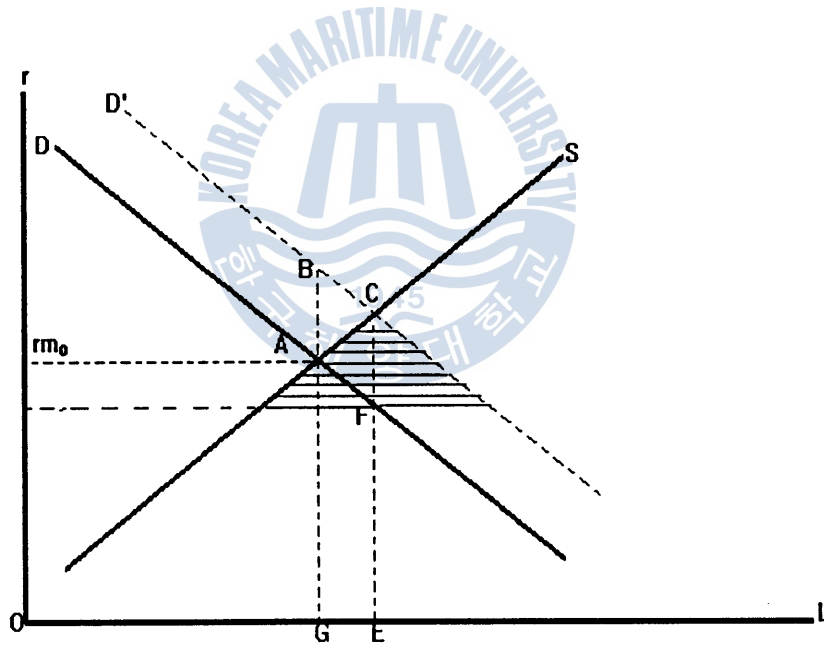
14) Kane, J., 1975, pp.32-44.

15) 1983, 3.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9개국의 開發金融機關代表들이 日本 동경에 모여 선진국 政策金融機關의 機能과 役割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선진국 개발금융기관도 앞으로는 기술개발 촉진, 불황산업정비, 지역사회개발지원, 중소기업육성, 개발리스크 부담분야의 지원, 종합적 금융지원체제구축, 경제산업정보서비스 기능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日本開發銀行, 선진국 개발 금융에 관한 포럼, 1983).

16) Silber, W.L., "Selective Credit Policies : a Survey", Banca Nazionale del Lavoro Quarterly Review, Dec. 1973, pp.328-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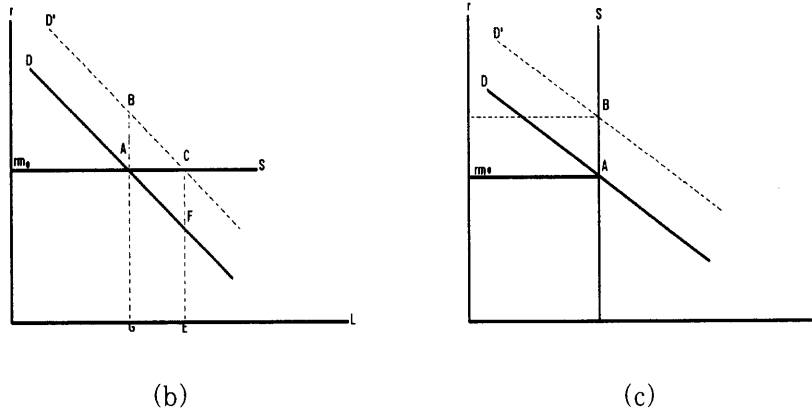
① 가격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림Ⅱ-1) (a)와 같이 특정부문의 신용수요(D)와 신용공급(S)에 따라 이자율이 r_{m0} 일 때, AB만큼의 이자보조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면 수요는 D' 로 늘어나게 되어 신용공급은 OG에서 OE로 증가한다. 이때 차입자들의 실효이자율은 EF이며 대부자들의 경우 EC이다. 이와같이 이자보조금의 지급은 특정부문의 신용공급증대 및 대부이자율상승, 차입이자율하락의 효과를 가져오나 빗금친 부분만큼의 명시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 크기는 대부자가 직면하는 금융수단의 공급탄력성(금융수단들의 대체성)에 따라 다르다. (그림Ⅱ-1)-(b)에서와 같이 공급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즉, 이자보조를 받는 대출로 다른 금융자원이 즉각적으로 이동)에는 AB의 이자보조금에 따라 차입자의 이자부담은 CF만큼 감소되며 GE만큼의 자금공급은 증가된다. (그림Ⅱ-1)-(c)의 경우처럼 공급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대부자의 이자수익만 상승할 뿐 특정부문의 자금공급증대와 이자부담감소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a)

17) 이영세 외, 전계서, pp. 25-30



(그림 II- 1) 이자보조금 지급의 효과

이 정책은 빚금친 부분만큼의 명시적 사회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정부의 공채발행 또는 일반조세수입등을 통해 조달되며, 조세수입을 통한 보조의 경우 정책효과가 상쇄될 요인은 없으나, 공채발행등의 방법은 금융시장에서의 공채공급증대로 다른 금융자산의 상대적 수익율을 높여 대체효과를 통해 특정부문에의 자금공급원을 고갈시키는 등 정책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②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경우

특정금융자산의 위험요소를 정부보증등의 조치를 통해 감소시킴으로써 특정부문에의 자금공급을 증대시키는 경우 이는 금융기관의 사기업적 특성으로 대출이 기피되는 부문의 대출시 위험을 정부가 보증하여 감소시킴으로써 특정부문에의 자금공급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금융자산의 위험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금융자산에 대해 이 자산의 대체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앞의 이자보조금정책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반면 자산구성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초래한다.

Ⅲ. 산업금융의 추이 및 효과

1) 산업금융의 추이

(1) 산업금융제도의 전개과정

① 정책금융의 유형과 추이

산업금융제도는 특히 60년대 이후 한국의 자본동원 및 배분체계를 결정지었던 정책금융의 제도 하에서 수행되었다.¹⁸⁾ 따라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포함하는 선별적 금융지원인 정책 금융에 비해 제조업부문에 대한 선별적 금융지원인 산업금융은 정책금융의 하위부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산업금융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정책금융제도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정책금융을 목적별로 보면 산업정책적 정책금융과 소득보조적 정책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추이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정책금융의 목적별 구성추이 (단위: %)

	1970	1980	1985	1990	1991	1992.7
산업정책적금융	59.1	74.0	70.6	59.8	59.4	57.5
개발기관대출	34.3	31.8	29.9	23.4	23.1	22.5
무역금융	14.8	19.7	15.9	4.4	4.2	4.4
수출산업설비금융	0.0	0.3	3.0	6.8	5.9	5.2
국민투자기금	0.0	4.6	4.9	2.3	1.8	1.5
상업어음할인	10.0	8.5	13.5	17.4	20.0	19.7
기타	0.0	9.1	3.4	5.5	4.4	4.2
소득보조적금융	40.9	26.0	19.4	40.2	40.6	42.5
중소기업자금	3.9	4.7	4.0	6.6	6.7	6.6
농수축산자금*	11.8	4.8	5.6	7.5	7.3	8.4
주택자금	5.8	10.7	11.8	17.6	18.0	18.2
재정자금	19.4	5.8	8.0	8.5	8.6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연보, 각호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정부의 경제정책목표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해 왔으며, 1950년대에는 주로 수입대체산업, 1960년대에는 수출산업, 1970년대에는 수출산업 및 중화학공업,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수출산업과 소득보조적 자금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이 공급되어 왔다. 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의 논의와 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일반은행 및 특수은행)과 개발기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추이는 <표III-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산업금융발전심의회는 정부통제금융이라는 개념하에 정책금융, 지시금융, 구제금융을 하위 구성요소로서 파악하고 있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 금융제도개편연구-총론- 1993.12. P.96.

〈표 Ⅲ-2〉 금융기관별 정책금융 취급 현황

(단위:10억원)

구분		1975	1980	1985	1989	1991	1992
일반은행 (A)	총대출금	22.900	74.763	19.800	35.055	54.622	61.532
	정책금융	8.278	28.002	7.503	12.474	19.807	23.797
	비율(%)	36.1	37.5	37.9	35.6	36.3	38.7
특수은행 (B)	총대출금	8.372	47.281	14.010	27.493	34.793	41.265
	정책금융	5.224	32.007	7.451	15.631	22.447	27.231
	비율(%)	62.4	67.7	53.2	56.9	64.5	66.0
예금은행 (C=A+B)	총대출금	31.272	122.044	33.810	62.548	89.416	102.797
	정책금융	17.770	60.009	14.954	28.125	42.254	52.028
	비율(%)	56.6	49.2	44.2	45.0	47.3	49.6
개발은행 (D)	총대출금	6.077	27.789	5.899	8.734	12.445	14.380
총계 (E=C+D)	총대출금	37.349	149.833	39.709	71.282	101.860	117.177
	정책금융	23.777	87.798	20.853	36.856	54.698	65.408
	비율(%)	63.7	58.6	52.5	51.7	53.7	55.8

주 : 1) 원화대출금 기준

2) 장기신용은행 제외

자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 연구안, 1993.4.9

한편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의 재원은 주로 금융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은행의 재할인 또는 대출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크기를 보면 1992년 7월말 현재 금융자금 97.0%, 재정자금 1.6%, 국민투자기금 1.4% 순이다.

② 산업금융제도의 체계 및 정비과정

A) 제도적추이

한국의 산업금융제도는 크게 보아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첫째,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실시된 수출진흥시기(1960-71)이다. 이 시기에는 수출촉진을 위해 산업금융도 부문별 투자배분에 우선 목표를 두었고, 특히 수출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체제가 확립되었다.

첫째,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실시된 수출진흥시기(1960-71)이다. 이 시기에는 수출촉진을 위해 산업금융도 부문별 투자배분에 우선 목표를 두었고, 특히 수출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체제가 확립되었다.

첫째,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실시된 수출진흥시기(1960-71)이다. 이 시기에는 수출촉진을 위해 산업금융도 부문별 투자배분에 우선 목표를 두었고, 특히 수출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체제가 확립되었다.

둘째, 중화학공업육성시기(1972-79)이다. 이 시기에는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철강·화학·금속·전기·조선·기계 등 특정산업에 대해 정부주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중화학공업의 장기설비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법이 공포되었다.

다음으로 기술선진화시기(1980-87)이다. 이 시기는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을 분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기는 산업정책의 조정기로서 70년대까지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었던 수출진흥정책과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시기이다. 산업금융의 주대상이 기술집약산업 및 중소기업으로 이동되었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간접적 유도정책을 사용했다. 후기는 공업발전법제정 이후의 시기인데 종래의 개별공업육성법은 폐지되고 기능별·비차별적 산업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산업금융도 기존의 산업별 지원으로부터 탈피하여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육성시기(1988-)이다. 이 시기는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중심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구조조정시기로서 1988년의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공업발전법공포 이후 특정산업지향(Industry Targeting)을 지양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특정산업지향이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¹⁹⁾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정기술지원(Technonogy Targeting)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책금융체계가 여러 기준에 의해 구분가능하듯이, 산업금융제도도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 가능하다. 우선 지원목적별 혹은 기능별로 구분하면, 기술개발·산업합리화·투자촉진·중소기업지원·수출지원·기타부문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재원별로 분류하면, 금융자금·재정자금·기금 등으로, 취급기관별로 분류하면 예금은행 및 개발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산업금융제도의 재원 및 취급기관과 지원목적별로 산업금융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19) UR보조금협상문제와 관련한 산업금융의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손상호, UR보조금·금융자율화와 산업금융·세계의 개편방안, 산업연구원, 1992.를 참조

B) 재원별 지원체계

산업금융을 재원별 및 취급기관별로 분류했을 때, 산업금융에 포함되는 통계항목의 내용 및 추이는 <표 III-3>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III-3> 재원별 및 취급기관별 산업금융의 추이 (단위: 10억원, %)

구 분	'75	'80	'85	'91
-전체 대출금 ¹⁾	3,865.3	18,417.2	47,366.5	118,393.3
-산업금융 합계	798.5	3,402.4	9,172.3	21,996.5
상업어음할인 ²⁾	176.4	744.2	2,672.3	10,908.1
무역금융	339.2	1,720.8	3,129.9	2,254.3
수출산업설비자금	61.2	26.2	595.2	2,201.1
에너지절약시설자금	-	2.0	227.0	28.5
재정자금	138.4	503.9	1,582.5	4,620.6
국민투자자금	53.4	405.3	965.6	983.9
연불수출금융 ³⁾	29.9	511.5	3,349.9	2,931.1
산업은행대출금	577.8	3,105.2	6,913.9	15,690.1
외화대출 ⁴⁾	343.6	2,596.1	3,292.0	10,356.5
-B/A(%)	19.9	18.5	19.4	18.6

주 : 1) 예금은행대출금+연불수출금융+산업은행대출+외화대출

2) 무역어음 포함

3) 수출입은행 대출금

4) 예금은행 외화대출금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호

산업금융의 재원별 및 취급기관별 분류의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 Ⓐ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할인은 기업단기운전자금의 주요 조달원으로서, 한은의 자동제한인 대상이었으나 94년 3월 총액대출제 실시로 인해 자동제한인제도는 폐지되었다²⁰⁾.
- Ⓑ 무역금융 및 수출산업설비자금: 산업금융의 이 항목들은 무역어음과 함께 수출지원관련 산업금융제도를 이룬다. 무역금융은 달러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융자단가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산업설비자금은 수출 산업 및 수입대체산업에 대해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이 자금은 석유사업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산업금융으로 기능별 분류로는 기타항목에 속하는 것이다.

20) 한국은행 자금부, 총액대출제 실시방안, 1994.2.

- ㉔ 재정자금: 예금은행의 재정자금대출은 재정으로부터 저리로 용자받아 예대마진을 더해 대출하는 것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상 부담이 적은 부분이다
- ㉕ 국민투자기금: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7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91년말 현재 대출규모는 예금은행 총대출금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취급대상은 중화학공업 등 주요산업의 설비·운전자금,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자금등이다. 국민투자기금은 현재 신규취급이 중단된 상태이나 자금조성시 금융기관의 저축 성예금에 의존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㉖ 연불수출금융: 연불수출금융은 투자규모가 크고 제작기간이 장기인 자본재의 연불수출방식에 대한 산업금융으로서, 수출물제작에 필요한 자금지원(인도전 금융) 및 수출물인도 후 수출대금회수시까지의 자금지원(인도후 금융)으로 구분된다.
- ㉗ 산업은행대출금: 산업은행대출금이 전체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년말 현재 13%정도이고, 산업금융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정도이다. 75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대출금에 대한 비중 및 산업금융총액에 대한 비중은 모두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별로 크지 않다.
- ㉘ 외화대출 : 외화대출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대외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설비자금 공급애로의 해소와 외환의 해외조달의존도 감소 등인데, 용자대상은 시설재 수입자금 및 차관상환자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표 III-4〉 용도별 외화대출 실적

(단위: 백만달러)

용자대상	'90		'91		'92. 8 말 현재	
	신규대출액	잔액	신규대출액	잔액	신규대출액	잔액
· 시설재 수입자금	5,205	12,646	5,536	16,194	1,758	16,326
· 해외투자자금	89	104	139	231	60	287
· 계획조선용	20	115	10	103	6	101
· 기자재 수입자금						
· 협조용자금	57	225	27	146	13	116
· 기타	458	3,209	551	3,172	334	3,254
계	5,829	16,299	6,263	19,846	2,171	20,084

주: 기타는 한전, 지하철공사 외채원리금 상환 등임

자료 : 재무부

C) 목적별 지원체계

- ㉑ 기술개발지원 산업금융 : 기술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금융의 세부항목으로는 공업발전

기금·국민투자기금·산업은행자금·석유사업기금·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venture capital자금 등의 항목이 있다. 이 중 공업발전기금의 산업기술향상자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Ⅲ-5>와 같다.

<표 Ⅲ-5> 공업발전기금 중 산업기술향상자금의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86 - '89		'90		'91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산업기술향상자금	1,685	1,917	285	630	165	700
· 시제품개발	1,322	1,364	200	310	105	160
- 기계류	793	823	110	170	60	90
- 전자기기	529	541	90	140	45	70
· 신소재	150	259	45	90	30	40
(섬유신기술)	(63)	(120)	(15)	(35)	(10)	(15)
· 공통취약기술	105	127	-	-	-	-
· S/W 개발	105	88	-	-	-	-
· 첨단산업기술개발	3	80	40	230	30	500

자료: 상공부

- ② 산업합리화지원 산업금융 : 이 항목에는 공업발전기금의 산업합리화자금·산업은행의 자동화설비자금·석유사업기금의 산업구조조정자금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석유사업기금지원은 현재 신규지원이 중단되었으며, 91년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자동화설비자금과 공업발전기금의 산업합리화자금의 지원규모는 각각 2500억원과 250억원이다.
- ③ 투자촉진지원 산업금융: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는 국민투자기금의 시설자금, 외화대출제도, 특별설비자금,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시설자금, 산업은행의 첨단산업육성자금·기계화국산자금·계획조선자금 등이 있다.
- ④ 중소기업지원 산업금융: 중소기업지원목적의 산업금융은 80년대 중반이후 산업정책의 기초가 변화하면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부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금융기관대출금의 중소기업 의무비율제도,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지원,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상의 우대조치등을 들 수 있다.
- ⑤ 수출지원산업금융: 이 부문에는 무역금융·수출보험제도, 수출산업설비금융·연불수출금융등이 포함된다.
- ⑥ 기타 산업금융: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직업훈련시설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환경오염방지금등을 들 수 있다.

(2) 산업금융의 배분구조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산업금융이 특정목적이나 기능별로 배분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배분되어 왔을 것이기 때문에 실태분석에 있어서도 산업별 배분실태분석이 산업금융의 추이분석에 있어 가장 설명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산업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별 산업금융자금의 배분비중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우선투자부문에 대해 산업자금이 효과적으로 집중되었는가를 고찰해 본다

이와 같은 분석에 있어 산업금융자금의 크기는 산업별로 발표되어있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예금은 행산업별 대출금과 산업은행산업별대출금중 설비자금의 크기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예금은행 및 산업은행의 총대출금중 운영자금에서보다 설비자금에 있어 정책금융, 즉 산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금융의 산업별 배분은 각 경제발전단계의 개발전략에 따라 달라져 왔다. 즉, 1950년대에는 수입대체산업에 대해, 경제개발초기단계인 1960년대에는 수출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1970년대에는 수출산업 및 중화학공업에 대해,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수출산업과 소득보조적 용도에 대해 자금이 공급되어졌다. 특히 80년대후반 이후에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육성과 중소기업육성의 목적에 맞춰 산업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은 <표Ⅲ-6>과 <표Ⅲ-7>에서 나타난다.

<표 Ⅲ-6>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비중 추이 (단위 : %)

연도	농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섬유 의복		목재 및 나무제품		종이 및 인쇄 출판		화학공업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1965	16.77	38.07	0.86	0.00	24.76	10.80	3.44	1.14	6.88	3.41	1.20	0.00	1.89	1.14	4.56	1.14
1967	10.43	27.10	1.53	0.27	28.47	13.55	3.67	1.36	7.26	4.61	1.49	0.00	1.78	1.08	6.05	1.63
1969	8.37	21.30	1.28	0.44	28.93	18.31	2.88	0.88	7.34	4.93	1.77	0.18	1.90	1.41	6.53	1.76
1971	8.74	21.99	1.51	0.27	29.74	17.10	2.93	1.41	7.16	4.72	3.00	0.16	1.74	1.36	4.99	1.74
1973	7.58	19.11	0.83	0.40	31.92	21.21	3.37	1.56	9.74	7.62	2.62	1.94	1.90	1.52	3.88	2.02
1975	6.18	18.03	0.71	0.19	33.85	22.34	3.99	1.89	10.18	7.97	1.80	0.77	1.81	1.32	4.76	2.46
1977	6.41	16.16	0.65	0.40	33.57	23.27	3.05	1.53	10.78	7.58	1.32	0.49	1.63	0.85	4.77	2.38
1979	5.52	13.81	0.83	0.26	32.95	22.29	2.16	0.96	9.48	5.49	1.39	0.57	1.66	1.01	4.71	3.23
1981	5.15	14.06	0.50	0.14	33.11	22.25	2.07	1.11	8.61	5.11	1.48	0.66	1.73	0.84	5.49	3.37
1983	5.40	13.94	0.43	0.11	30.33	19.42	2.10	1.48	7.10	4.02	1.46	0.40	1.61	1.04	5.03	3.02
1985	5.55	15.67	0.36	0.06	28.50	19.30	2.40	1.51	6.65	3.52	1.18	0.46	1.52	1.08	4.61	3.05
1987	6.51	13.47	0.22	0.05	29.11	25.13	2.15	1.69	6.41	4.12	1.00	0.23	1.48	1.01	4.49	3.95
1989	6.44	17.54	0.25	0.05	27.34	28.83	2.17	1.92	5.61	4.71	0.85	0.27	1.49	1.04	4.16	5.10
1991	7.06	17.31	0.27	0.05	33.33	28.89	2.38	2.05	5.96	4.39	1.02	0.43	1.67	1.09	5.76	6.39
1992	6.68	18.37	0.32	0.10	33.51	27.28	2.44	1.91	5.98	4.24	0.70	0.35	1.69	1.17	5.43	5.57

연도	비철금속		제 1 차 금속		조립금속기계		전기가스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항공		금융업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1965	1.03	0.00	0.69	0.57	3.10	1.70	0.00	0.00	1.29	0.00	10.49	0.57	0.86	0.57	0.00	0.00
1967	1.42	0.54	0.85	0.27	3.27	2.71	0.40	0.00	3.56	13.55	10.46	1.90	1.07	0.27	0.00	0.00
1969	0.93	0.70	0.98	0.97	4.12	5.99	0.50	0.70	4.58	13.91	11.76	0.88	1.78	1.41	0.00	0.00
1971	1.44	0.60	1.23	1.09	4.07	4.51	0.64	0.16	5.89	15.09	6.57	0.16	1.58	1.25	1.17	0.00

1973	1.56	0.90	1.74	1.27	4.54	3.35	0.21	0.04	5.73	13.74	4.07	0.85	1.82	1.08	0.95	0.35
1975	1.74	1.07	1.91	1.39	5.47	4.13	0.28	0.06	5.01	14.21	3.89	0.93	2.21	2.26	1.01	0.35
1977	1.34	0.80	2.77	2.56	6.58	6.39	0.18	0.04	4.77	13.73	4.33	1.70	2.45	2.58	0.84	0.19
1979	1.35	1.38	2.96	2.08	7.76	6.88	0.18	0.10	6.79	20.44	4.43	1.85	2.27	2.34	1.02	0.19
1981	1.54	2.39	2.91	1.50	7.55	6.22	0.41	0.12	5.70	18.59	4.54	1.70	1.81	1.28	1.23	0.16
1983	1.41	1.74	2.65	1.58	7.51	5.32	0.24	0.10	8.03	21.93	6.39	1.40	1.83	0.93	1.78	1.15
1985	1.31	1.28	2.38	1.77	7.77	5.87	0.24	0.17	10.32	21.71	6.11	1.22	1.87	0.61	1.66	0.66
1987	1.11	1.07	2.04	2.12	9.53	10.29	0.12	0.15	10.92	17.83	4.66	0.91	2.16	0.67	1.12	0.26
1989	1.02	1.35	1.78	2.27	9.20	11.40	0.12	0.16	6.36	3.09	4.62	1.00	2.13	0.43	4.28	0.30
1991	1.34	1.42	2.24	1.78	11.33	10.28	0.16	0.17	5.39	2.10	5.56	1.27	1.68	0.31	3.67	0.29
1992	1.53	1.59	2.22	1.59	12.15	9.87	0.22	0.23	5.10	2.32	5.58	1.37	1.38	0.32	4.82	0.37

〈표 III-7〉 산업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추이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음 식료품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및 나뭇제품		인쇄, 출판		화학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1967	0.74	0.32	3.71	3.03	31.52	28.71	2.97	3.03	6.92	6.22	0.49	0.48	1.98	1.59	7.91	8.29
1969	0.00	0.00	3.91	3.42	29.36	25.39	2.37	2.40	6.62	6.00	0.77	0.92	1.60	0.83	5.44	5.17
1971	0.17	0.23	4.46	3.66	29.21	24.49	2.02	2.21	4.21	3.83	0.84	0.81	0.93	0.70	6.10	5.69
1973	0.07	0.09	3.40	2.11	26.65	22.41	1.58	1.26	3.84	3.54	0.48	0.32	1.05	1.11	4.17	2.66
1975	0.20	0.11	2.27	1.41	26.25	23.06	1.32	0.87	3.04	2.70	0.38	0.12	0.81	0.82	5.10	4.36
1977	0.33	0.08	1.21	0.79	30.46	27.96	0.66	0.46	2.46	2.07	0.24	0.13	0.60	0.61	6.44	6.77
1979	0.41	0.15	0.55	0.50	32.90	30.57	0.25	0.19	2.10	1.50	0.08	0.05	1.30	1.36	6.20	6.35
1981	0.14	0.06	0.16	0.19	33.18	28.53	0.14	0.13	1.58	1.28	0.03	0.03	1.55	1.30	4.95	4.75
1983	0.32	0.19	0.55	0.32	31.37	26.38	0.15	0.16	1.46	1.28	0.02	0.02	1.62	1.05	4.38	3.85
1985	0.04	0.00	0.31	0.25	30.65	27.41	0.40	0.47	1.60	1.47	0.02	0.01	1.65	1.27	4.15	4.04
1987	0.00	0.00	0.32	0.15	33.32	32.00	0.51	0.56	1.74	1.89	0.02	0.02	1.41	1.32	6.00	6.04
1989	0.02	0.02	0.06	0.07	33.69	33.50	0.62	0.42	1.53	1.52	0.02	0.01	1.31	1.29	7.89	9.24
1991	0.02	0.02	0.03	0.04	35.63	35.71	0.86	0.89	1.33	1.29	0.08	0.10	1.46	1.61	9.39	10.70

	비금속광물		제 1 차		조립금속		전기 가스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		금융보험 및 부동산 용역업	
	총액	설비자금	금 속	기 계 및 장 비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총액	설비자금
1967	3.21	2.71	1.61	1.59	6.06	4.31	20.64	26.63	0.00	0.00	0.00	0.00	7.05	8.93	0.00	0.00
1969	4.04	3.51	2.09	2.22	6.28	4.16	19.18	23.92	6.76	8.96	0.00	0.00	4.67	5.91	0.00	0.00
1971	3.45	2.96	2.61	1.92	8.67	5.92	19.82	26.64	4.84	6.62	1.05	1.22	4.76	6.50	1.89	2.32
1973	2.33	1.46	5.97	6.26	7.16	5.73	26.91	35.58	2.35	2.75	0.72	0.79	5.64	7.46	4.13	4.18
1975	2.11	1.75	5.92	6.28	7.53	6.15	24.98	31.25	3.37	3.99	0.67	0.74	9.56	11.50	4.00	3.34
1977	2.80	2.27	7.18	6.47	10.05	9.17	19.98	23.91	2.44	2.67	0.90	1.03	10.54	12.39	2.13	2.33
1979	3.81	3.40	8.65	7.98	10.46	9.70	16.74	19.71	2.40	2.76	0.41	0.48	11.10	12.73	1.61	1.88
1981	3.36	3.19	9.96	8.22	11.57	9.59	13.18	17.46	2.57	3.24	0.27	0.21	15.52	19.57	1.48	1.94
1983	2.33	2.65	8.85	5.95	12.56	11.42	11.96	16.34	2.04	2.77	0.65	0.72	19.04	23.89	0.63	0.86
1985	3.03	3.46	6.78	3.60	13.02	13.08	12.71	15.41	2.27	3.01	0.85	1.12	20.47	22.90	0.61	0.81
1987	2.67	3.00	6.09	5.01	14.87	14.16	7.71	9.89	1.53	2.02	1.29	1.69	19.18	17.88	2.52	3.32
1989	2.54	2.71	6.36	6.29	13.41	11.76	4.54	5.50	1.01	1.23	1.17	1.44	20.04	17.98	4.36	5.32
1991	3.40	3.80	6.88	7.12	12.21	10.18	5.18	4.22	1.70	2.04	0.71	0.85	13.88	12.79	5.14	6.18

〈표III-6〉에서 보여지듯이 예금은행 총대출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60년대에는 농업, 도·소매업 및 숙박업, 섬유·의복·피혁공업, 70년대에는 섬유·의복·피혁공업 농업, 조립금속, 기계장비, 80년대 이후에는 조립금속, 기계장비공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숙박업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구조고도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예금은행 설비자금의 산업별대출비중을 보면 농업의 경우 설비자금의 비중이 있어 총대출비중보다 크게 나타나 농업에 대한 대출은 주로 설비자금의 지원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80년대 중반까지의 설비자금공급은 주로 건설업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80년대 이후에는 조립금속·기계장비산업에의 설비자금의 공급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표Ⅲ-7〉에서 산업은행의 총대출금배분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1960년대에는 전기·가스·수도업, 화학, 석유제품, 기계·조립금속·장비업, 1970년대에는 전기·가스·수도업,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업, 화학·석유제품 등의 순이며, 1980년대 이후에는 운수·창고·통신업, 조립금속기계·장비업, 비철금속, 화학·석유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전기·가스·수도업은 80년대 중반까지는 그 비중이 매우 컸으나 80년대 중반이후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반면 운수·창고·통신업과 조립금속·기계·장비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의 경우 대출금은 주로 중화학공업에 치중되어졌으며 6·70년대에 있어서는 전기·가스·수도업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중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은행의 설비자금에 있어서도 총대출금의 경우와 산업별비중이 유사하며 각 산업의 총대출금비중과 설비자금비중이 거의 같아 산업은행대출공급의 대부분이 주로 설비자금에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예금은행 및 산업은행 총대출금과 설비자금이 각 산업에 할당되어진 비중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예금은행의 경우에는 산업구조고도화단계에 맞추어 산업별 대출금의 비중이 변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중화학공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출이 집중되어 졌으며 특히 1970년대에는 제조업전체에 배분된 크기에 상당하는 자금이 전기·가스·수도사업에 배분되어 졌으며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에도 80년대 이후 20%내외의 매우 큰 규모의 자금이 배분되어졌다는 점이 예금은행의 경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금은행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설비자금의 비중은 총대출금의 비중보다 작는데 비해 산업은행의 경우 설비자금비중이 보다 크며 이는 건설업의 경우 설비자금의 비중이 보다 큰 것과 대비된다. 또한 음식료품업, 섬유·의복·피혁업 등의 경공업의 경우 산업은행에 비해서 예금은행의 경우 총대출공급이나 설비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단 금융·보험·부동산업의 경우 예금은행이나 산업은행 모두 80년대 중반이후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으나 예금은행의 경우 주로 운영자금으로 지원했을 뿐이며 이에 비해 산업은행의 경우 주로 설비자금으로 공급되어지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산업금융의 효과

여기서는 우리나라 산업금융정책의 효과에 관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산업금융의 효과에 관해서도 지금까지의 산업금융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배분되어져왔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산업별 효과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각 산업별로 할당된 산업자금이 실제 각 산업의 산출·고용·수출·노동장비율·기계장비규모·토지건물 총액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보고 이를 산업간 비교해 본다. 이와 같은 계량분석에 있어서도 산업금융자금의

크기는 산업별로 발표되어있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예금은행산업별 대출금과 산업은행산업별대출금중 설비자금의 크기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계량분석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에 발표된 산업별 대출금자료 및 산출,고용,수출에 관련된 자료와 기업경영분석에 발표된 산업별 각종 기업경영분석지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67 ~ 1991년의 25년간으로 연도별자료를 사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은 RATS의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유의한 변수추출을 위해 stepwise를 사용하였다.

(1) 산업별 생산에 미친 효과

산업별 은행설비대출자금의 공급이 산업별 생산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보기위하여 (III-1)식과 같은 함수를 구성하여 산업별 자료에 따라 계량분석하였다.

$$\log \text{GDP} = \alpha_0 + \alpha_1 \log \text{EQL} + \varepsilon_1 \text{-----(III-1)}$$

GDP : 산업별 총생산액

EQL : 산업별 설비자금대출 총액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II-8> 산업별 생산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산업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R**2	DURBIN-WATON
제조업(전체)	C	2.8297	12.99	.97	.80
	EQL	.8056	26.39		
음·식료품	C	3.9710	17.70	.93	.24
	EQL	.9550	18.10		
섬유·의복 및 가죽	C	2.6202	24.83	.99	1.00
	EQL	1.0476	52.87		
목재 및 나무제품	C	3.8257	22.38	.89	.72
	EQL	.8550	11.54		
종이 및 인쇄·출판	C	3.1928	24.29	.97	1.27
	EQL	.8400	28.51		
화학물·석유·석탄 고무, 「플라스틱」	C	3.2203	14.52	.96	.23
	EQL	.9252	23.56		
비금속 광물제품	C	2.4898	26.60	.99	.65
	EQL	.8895	46.81		
제 1 차 금 속	C	2.8160	29.04	.99	.45
	EQL	.8635	48.79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C	2.6423	5.33	.86	2.01
	EQL	.9771	12.20		

제조업전체에 걸쳐 대출설비자금이 각 산업의 산출에 미친 효과는 유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값 역시 크게 나타나 설비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어졌다. 특히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산업이나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생산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종이 및 인쇄·출판산업이나 목재및 나무제품산업의 경우 그 효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업별수출에 미친 효과

산업별 대출금이 수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함수를 구성하여 산업별 자료에 따라 계량분석해 보았다.

$$\log EXP = \beta_0 + \beta_1 \log EQL + \varepsilon_2 \text{ ----- (III-2)}$$

EXP : 산업별 수출총액

산업별 계량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 산업별 수출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산업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R**2	DURBIN-WATON
제조업(전체)	C	3.1081	14.94	.97	.30
	EQL	.8362	29.22		
음·식료품	C	2.4080	8.99	.92	.86
	EQL	1.1178	13.29		
섬유·의복 및 가죽	C	3.4326	22.91	.98	.69
	EQL	.9173	32.61		
목재 및 나무제품	C	2.0658	4.77	.78	1.15
	EQL	1.4306	7.63		
종이 및 인쇄·출판	C	-.4446	-1.05	.83	.66
	EQL	1.0322	10.91		
화합물·석유·석탄 고무, 「플라스틱」	C	.8445	2.16	.89	.19
	EQL	.9616	13.89		
비금속 광물제품	C	.9949	1.78	.62	.23
	EQL	.7151	6.30		
제 1 차 금 속	C	1.3526	5.66	.95	1.04
	EQL	.9604	22.00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C	1.7128	9.64	.98	.42
	EQL	.9987	34.75		

산업별 은행대출설비자금이 산업별 수출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유의성이 높으며 그 계수값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목재 및 나무제품, 음식료품, 종이 및 인쇄출판의 경우 계수값이 1을 상회하는 큰 값으로 나타나 은행대출자금의 공급이 수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비해 비금속광물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에의 영향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산업별 고용에 미친 효과

산업별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 EMPL = \gamma_0 + \gamma_1 \log EQL + \varepsilon_3 \text{ ----- (III-3)}$$

EMPL: 산업별 고용

위의 함수에 의한 산업별 계량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 산업별 고용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산업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R**2	DURBIN -WATON
제조업(전체)	C	3.3207	6.62	.71	.50
	EQL	.5314	7.71		
음·식료품	C	4.2697	75.71	.91	.91
	EQL	.2235	12.62		
섬유·의복 및 가죽	C	4.9219	56.72	.91	.23
	EQL	.2547	15.63		
목재 및 나무제품	C	3.2446	40.27	.84	1.20
	EQL	.3153	9.0306		
종이 및 인쇄·출판	C	3.6526	97.58	.95	1.11
	EQL	.1837	21.89		
화합물·석유·석탄 고무, 「플라스틱」	C	3.8635	56.68	.96	.44
	EQL	.2821	22.74		
비금속 광물제품	C	3.5145	106.17	.97	1.01
	EQL	.1886	28.07		
제 1 차 금 속	C	2.9415	62.69	.97	.75
	EQL	.2403	28.06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C	4.0541	68.88	.98	.56
	EQL	.3408	35.81		

은행의 설비자금 대출이 각 산업의 고용에 미친 효과는 유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계수값은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목재 및 나무제품,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업의 경우는 고용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비금속 광물제품, 음식료품업 등의 경우에는 설비자금공급에 따른 고용증대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산업별 노동장비율에 미친 영향

산업별 노동장비율에 미친영향을 분석하기위한 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 TFA = \eta_0 + \eta_1 \log EQL + \varepsilon_4 \text{ -----(III-4)}$$

TFA : 산업별 노동장비율

계량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 산업별 노동장비율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산업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R**2	DURBIN-WATON
광업	C	4.1277	8.00	.69	.19
	EQL	1.2070	7.24		
제조업(전체)	C	4.6344	26.17	.95	.76
	EQL	.5294	21.33		
음·식료품	C	5.9588	41.67	.93	.87
	EQL	.6207	18.16		
섬유·의복 및 가죽	C	4.8583	36.51	.96	1.03
	EQL	.6036	23.71		
목재 및 나무제품	C	6.1425	50.80	.93	1.36
	EQL	.7231	17.76		
종이 및 인쇄·출판	C	6.1717	47.41	.93	.85
	EQL	.5493	18.52		
화합물·석유·석탄 고무, 「플라스틱」	C	6.0696	27.48	.85	.57
	EQL	.4800	12.07		
비금속 광물제품	C	6.6141	45.88	.92	.62
	EQL	.4934	16.86		
제 1 차 급 속	C	6.3659	41.02	.94	.93
	EQL	.5759	20.02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C	5.0573	31.15	.94	.56
	EQL	.5219	19.53		
건설업	C	3.0682	8.74	.84	1.56
	EQL	.6525	11.25		
전기·가스업	C	5.7563	13.62	.87	.17
	EQL	.8596	12.70		
운수·창고업	C	6.1758	30.66	.88	.80
	EQL	.4407	13.42		

은행이 각 산업에 할당한 설비자금이 각 산업의 노동장비율에 미친 영향은 양의 효과를 가지며 유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업의 경우 계수값이 1.2에 달해 은행설비대출자금이 노동장비율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기·가스업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운수·창고업, 화학·석유산업의 경우에는 노동장비율에 영향을 다소 낮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산업별 기계장비규모에 미친 영향

산업별 기계장비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함수를 구성하여 계량분석하였다.

$$\log EQMC = \mu_0 + \mu_1 \log EQL + \varepsilon_5 \text{-----(III-5)}$$

EQMC: 산업별 기계장비규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 산업별 기계장비율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

산업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R**2	DURBIN -WATON
광업	C	-.6716	-1.33	.72	.22
	EQL	1.2396	7.60		
제조업(전체)	C	.7676	4.68	.99	1.18
	EQL	.9431	42.14		
음·식료품	C	.5582	2.48	.95	.45
	EQL	1.0543	20.51		
섬유·의복 및 가죽	C	.9312	4.01	.96	1.04
	EQL	.9633	22.71		
목재 및 나무제품	C	1.3236	9.60	.94	1.04
	EQL	.8195	18.16		
종이 및 인쇄·출판	C	.8306	3.48	.93	1.41
	EQL	.8623	16.69		
화합물·석유 석탄·고무, 「플라스틱」	C	1.3176	5.70	.95	1.18
	EQL	.8272	20.82		
비금속 광물제품	C	1.0540	6.62	.97	.89
	EQL	.8384	26.37		
제 1 차 금 속	C	.1200	.81	.99	1.50
	EQL	1.0675	41.10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C	-.6484	-2.65	.97	1.81
	EQL	1.0555	27.58		
건설업	C	-1.3981	-2.967	.88	1.37
	EQL	.9790	12.63		
전기·가스업	C	-.3714	-.65	.86	.43
	EQL	1.0676	11.71		
운수·창고업	C	-3.4332	-5.95	.84	1.64
	EQL	.9974	10.88		

기계설비장비의 증가에 미치는 은행대출설비자금공급의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업, 제 1차 금속, 조립금속산업, 음식료품 산업에 있어서는 설비자금의 대출공급이 기계장비규모의 증대에 1보다 큰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목재 및 나무제품, 화학석유제품의 경우에는 0.8을 상회하는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산업별 토지건물총액에 미친 영향

산업별 토지건물총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 LND = v_0 + v_1 \log EQL + \varepsilon_6 \text{ ----- (III-6)}$$

LND : 산업별 토지건물총액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 산업별 토지·건물총액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

산업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R**2	DURBIN-WATON
광업	C	-.2681	-.52	.76	.22
	EQL	1.4107	8.57		
제조업(전체)	C	-.0422	-.29	.99	.77
	EQL	1.0287	50.59		
음·식료품	C	.2939	1.50	.97	.43
	EQL	1.1671	25.64		
섬유·의복 및 가죽	C	-.4198	-2.09	.98	1.33
	EQL	1.1587	31.65		
목재 및 나무제품	C	.7121		4.62	1.53
	EQL	1.1408	22.60	.96	
종이 및 인쇄·출판	C	.0678	.3046	.95	1.32
	EQL	.9766	20.27		
화합물·석유 석탄·고무, 「플라스틱」	C	.5382		2.51	1.50
	EQL	.3913	25.33	.97	
비금속 광물제품	C	-.6076		-1.33	.81
	EQL	1.0680	11.36	.85	
제 1 차 금 속	C	-.4554		-2.33	.81
	EQL	1.0669	30.34	.9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C	-1.4052		-2.46	1.69
	EQL	1.2045	13.87	.91	
건설업	C	-1.9002		-3.12	.61
	EQL	1.1172	11.62	.87	
전기·가스업	C	-.5385		-.65	.33
	EQL	1.0853	8.43	.77	
운수·창고업	C	-.8358		-2.38	.41
	EQL	.8508	15.88	.92	

은행의 설비자금대출공급이 각 산업별 토지·건물자산총액의 규모에 미친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 및 인쇄출판업, 운수창고업, 석유·화학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 있어 계수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의 토지·건물자산보유에 관한 유인이 증가하여 생산능력에 확충에 필요한 부동산보유의 증가와 아울러 설비자금이 부동산 보유에로 전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V. 금융자율화와 산업금융

1) 금융자율화의 의의 및 추이

(1) 금융자율화의 의의

① 금융규제와 금융산업

금융규제는 화폐경제하에서 각국정부가 인플레이적인 자원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화폐대체재의 발달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무수익자산인 화폐의 절약을 위한 금융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는 화폐화를 통한 재원조달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²¹⁾ 그 후 국내외적인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하여 예금이자에 계속 억제하기 힘들게 되자 각국정부는 무이자지급준비금을 보유하게 하거나 무이익정부국채를 제2선준비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시장수익율을 반영한 은행자산수익율과 규제하의 은행부채인 예금이자율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러한 비경쟁시장을 해소시키기위한 은행산업에의 진입이나 금융혁신은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이와 같은 화폐화과정에서의 금융규제 외에도 금융산업의 공공성에 따라 경제안정을 위하여 신용질서의 안정과 예금자보호를 위한 가격통제와 진입장벽 그리고 자산운용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기도 한다. 한편 정부가 경제성장의 효율을 증가시키기위해 금융자원의 배분권을 장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규제도 존재한다. 이는 특히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수요에 비해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관치금융이나 정책금융의 개념으로 대변될 수 있으며 정부주도형성장전략을 수행하기위하여 금융자원을 정부가 장악하여 투자우선부문에 자금을 집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통화금융기관을 완전히 통제하고 저금리정책을 고수하였다.²²⁾

21) G. M. Von Furstenberg, "Financial Innovations in Developed Economics and Financial Reform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Reform, Korea Federation of Banks, 1985, 9, pp. 8~10

22) 이재용, "한국의 금융자율화와 비은행금융산업", 「금융혁신과 금융정책」, 전국은행연합회, pp. 213~246, 1985, 9

이러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첫째, 중앙은행을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예금은행을 국영화하여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였고²³⁾, 둘째, 화폐나 예금의 대채재발달을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조건에 있어서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대출심사기능을 저해시켰다는 주요한 특징을 가진다²⁴⁾.

그 결과 한국의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대출이 효율적으로 동원되지 못하였으며 불건전금융관행의 만연, 기업재무구조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첫째, 금융기관의 정상적 금융관행이 훼손되어지고 은행의 위험자산비율이 급격히 높아졌고, 한국은행이 대외지급보증이나 각종 특별자금을 취급하게 되었으며 예금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완화, 담보비율·융자비율철폐 등이 초래되어 전통적인 건전금융관례와 금융규범이 훼손되게 되었다.

둘째, 금융기관의 금융기능상실과 경직화 현상이다. 금융기관의 자금선별권이 박탈되고 정부에 의해 하달된 취급규정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는 출납창구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금융이 행정화되었으며 은행의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 투자심사, 사후관리, 경영지도 등의 금융기능이 상실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부문은 경직화되어 시장변동에 따라 자금수급을 흡수·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셋째, 금융자금배분의 편중현상이다. 경제의 주요 투자정책이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존하였고 은행대출·외자 등의 주요 자금배분을 정부가 독점함으로써 금융자원이 특정부문·특정기업에 집중되고 이는 경제력집중현상을 낳았다.

넷째, 기타 파생적인 부작용으로 통화신용정책의 기능과 목표의 불명확성의 초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괴리확대, 국민경제의 불균형발전, 산업간불균형심화, 담보대출에 의한 부동산투기의 조장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²⁵⁾.

② 금융자율화의 의의 및 단계

금융자율화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며 대체로 금융산업에의 국가개입을 줄이고 금융거래가 시장가격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일정한 국가개입과 통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율화는 이러한 금융산업에 대한 고유한 규제를 최대한 시장기구에 일임하는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자율화는 금리자유화, 금융기관자금운용의 자율성제고,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경영합리화 및 내부경영자율화의 추진,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금융감독기능강화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3) 이는 1962·1963년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법개정, 1961년 은행법개정·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정, 각종 특수은행과 개발은행설립 등에 의해 촉진되어졌다.

24) 정책금융, 지시금융 등의 운용을 가능케한 1962년 금융부문자금운용규정 및 금융기관 선별용자지침의 구체화작업 등을 들 수 있다.

25) 민병균, "금융산업의 자율화", 경제민주화의 기본구상, 한국경제연구소, 1988. 4. pp. 353~355.

우리나라의 금융자율화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몇 가지의 조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내의 자율화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

우리나라의 금융자율화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몇 가지의 조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내의 자율화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

우리나라의 금융자율화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몇 가지의 조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내의 자율화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화조치의 첫번째 단계는 무엇보다도 정부에 의한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에의 참여를 해

소하여 금융기관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영화(privatization)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보유의 금융기관주식을 매각하여 정부기업의 형태로부터 민간기업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후속되는 제반 자율화단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단계의 자율화조치는 규제철폐(deregulation)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금융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의 자율화를 의미하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금융이나 지시금융 등의 경직적이고 타율적인 신용할당의 축소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회복되어야하며 은행의 자금배분의 자율성회복과 대출조건의 자유화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단계의 자율화는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다. 이는 자본자유화(liberalization)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및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영업허용을 의미한다. 이 자본자유화를 통해 이미 선진국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금융혁신이 유입됨으로서 국내금융시장의 보다 포괄적인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이 초래된 것이다.

네번째 단계는 금융혁신(innovation)이 될 것이다. 선진국은 지속적인 금융자율화과정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비교우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개도국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개방에 대응하기위한 국내금융산업의 혁신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금융혁신은 금융산업간의 경쟁을 보다 심화시키며 금리자유화와 업무영역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유동성제약(liquidity constraint)의 완화, 금리의 자원배분기능 제고 및 금융기관의 국내외 금융중개기능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와²⁶⁾ 국제금융시장에의 편입을 순조로이 이행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자율화가 이상과 같은 단계에 따라 추진 될 것이라는 정책적 보장은 없다. 반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억압된 상태에 있었고 UR협상에 따라 자율화를 보다 시급히 추진해나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기 때문에 각 단계의 자율화조치가 병행적으로 추진되어가는 상황에 있다고 보아진다.

26)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총론-, 1993. 12. P.21

〈표 15〉 금융자율화의 단계

제 1 단계	민영화 (Privatization)	·은행민영화 -정부보유주식매각 ·은행 경영·인사 자율성 회복 ·경영효율개선
제 2 단계	규제철폐 (Deregulation)	·중앙은행 독립성 회복 ·금융자금배분 자율성 회복 ·은행경영자율화
제 3 단계	자유화 (Liberalization)	·외환자본자유화 ·외국금융기관 국내영업 자유화 ·세계금융시장에의 통합
제 4 단계	금융혁신 (Innovation)	·금리자유화 ·업무영역 조정 ·금융산업간경쟁심화-신금융상품 창출

(2) 금융자율화의 추이

금융산업의 낙후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79년 2월 한국은행의 “금융산업 낙후성과 개선방안”으로 부터였다. 그 이후 1980년 12월 정부는 최초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율화조치를 시도하여 은행의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고 1981년부터 한일은행을 시작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1982년에는 금융기관경영에 대한 포괄적 지시 명령권을 삭제(은행법개정)하였고, 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선임권과 파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20년만에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경쟁촉진을 위해 '82, '83년 중 한미, 신한은행을 추가로 신설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하였다.

'86년 이후 경상수지흑자가 달성되자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가중되면서 금융시장개방이 함께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 후 '91년 자본거래에 있어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영업활동허용과 '92년 1월 외국인의 국내증시에 대한 직접투자허용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92년 3월 “제 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을 마련하여 '97년 이후에 완전한 금융시장개방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의 하나로 '94년 2,6월의 1,2단계 외환제도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금융자율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리자유화는 '88년 12월에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실물경제여건의 미비로 성공하지 못하고 3개월만에 다시 금리규제로 회귀하였다. 그 후 '91년 11월 “단계적 금리자유화추진계획”에 의거 제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단행되어졌으며 '92년에 들어와 시중금리가 대체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금리에 대한 행정지도가 부분적으로 지속되는 등 실질적인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93년 12월 추가적으로 “제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되어 자율화의 폭(여신금리의 84%, 수신금리의 51%)이 더욱 확대되었다.

〈표 16〉 금리자유화 추진과정 및 계획

시 기	조 치 내 용
91.8	「4단계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91.11	1단계 자유화(자유화 시동) -일부 단기여수신 금리 및 3년이상 정기예금 금리 -2년이상 회사채
93.11	2단계 자유화(대출금리 자유화) -재정지원 및 한은재할인대상 대출 제외 모든 여신 -2년이상 장기수신, 만기 2년미만 회사채 발행금리 - 통화채 국공채발행금리
94.7	3단계 자유화 부분 조기시행(수신금리자유화대비) -CD RP CP 등 단기시장성상품 만기조정 -은행에 표지어음제도 도입
94~96	3단계 자유화(금리자유화의 사실상 완료단계) -재정지원 및 한은 재할인대상대출 -시장금리 연동부상품(MMC MMF)도입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2년 미만 수신(장기→단기로 추진)
97이후	4단계 자유화(장기추진과제) -요구불예금 및 미자유화 단기수신

금융기관민영화와 경영자율화는 '94년 국민은행, 외환은행, '96년 중소기업은행, '97년 주택은행 등의 민영화를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아직 민영화에 따른 은행소유구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민영화추진일정 및 민영화에 따른 금융시장효율성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를 배제하고 금융전업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금융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고자하는 은행소유구조개선방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될 때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조정과 금융기관 대형화·전문화, 특수은행 등 금융구조개편은 '97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업무영역조정문제는 세계적인 겸업주의의 추세에 따라 각 금융산업간 활발한 금융상품개발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이러한 시장변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간의 분리가 쉽게 해소되기 힘들며 심도있는 금융 서비스의 부족, 은행의 수익성저하라는 겸업주의의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업무영역조정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금융자율화는 OECD에의 가입, WTO출범에 따라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짧은 기간에 이해상충되는 많은 자율화과제를 광범위하게 수행해 나가는 작업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과정이며 각 사안별로 조정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자율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와 자율화의 실패를 경험한 국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자율화의 지침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

〈표 17〉 금융자율화 추진 과정

<p>금리자유화 (94~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시장성 상품의 자유화폭 확대(7~8) ·상업어음할인 등 한은 재할인대상 대출금리의 자유화(96) ·2차보전받는 금융자금 대출금리 자유화 ·요구불예금 제외한 수신금리자유화 ·MMC MMF등 시장금리연동부상품 도입(97) ·단계적인 요구불예금 금리자유화 ·단기시장성상품에 대한 제한 철폐
<p>금융기관경영자율화 (96~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기관경영자료의 대외공시 강화(96~97) ·금융신상품개발 자율성부과 ·점포증설규제 단계적 완화
<p>금융기관자금운용자율화 (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은 자동재할인 및 대출의 단계 축소 ·정책금융을 특수은행, 재정으로 단계적 이관 ·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부동산취득 승인제 축소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단계적 축소정비(96~97) ·여신금지부문 단계적 축소(97) ·여신관리를 계열기업군별 여신한도관리로만 국한 ·동일계열기업군 단위로 매출액자기자본 등을 감안 여신한도 설정·운영
<p>부실채권 정리(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합리화여신의 조기 상각 지원
<p>금융기관 대형화·전문화 (94~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신탁제도 개선 ·증권사의 전문화 대형화 유도(96~97) ·생·손보사의 제3분야 상호진출 허용(96~97) ·단자·종금사의 업무영역 통합 ·투신사 신탁형증권저축 및 이익보전 제도 단계폐지 ·투신사조직개편(판매·자산운용 분리)
<p>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 (94~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사에 증권관련 선물옵션, 연계상품 등 신상품 허용 ·증권사 BMF, 단자사 CMA업무 단계축소 ·투자신탁 펀드자금운용규제 완화, 해외투신업무 활성화 ·보험사의 장기유가증권투자 확대 ·증권사에 외국환업무 제한적 허용 ·종금사 외국환업무확대(97~97) ·은행, 보험사에 국공채창구 매출 허용 ·은행에 금리 및 환율연계 선물옵션상품개발 허용 ·종금사 증권투자신탁 업무 폐지 ·증권사에 투신업무간접지출 허용
<p>특수은행 개편 (94~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은행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농수축협 신용사업분리, 독립사업부제 운용 ·일반은행에 대한 주택청약예금 허용 ·국민은행민영화 ·중소기업은행과 주택은행 민자참여 확대(96~97)
<p>외환자유화(94~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해외외화보유한도 완화 ·실수요증명제도 완화 ·은행간 환율변동폭 확대, 현물환 매각초과포지션 한도조정(96~97) ·일상거래 실수요증명 면제 ·변동환율제 정착추진 ·원화결제범위 무역외거래 등으로 확대

2) 금융자율화하의 산업금융제도

(1) 금융자율화 과정의 보완

금융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서는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자금수요의 구조적 비효율성 제거, 대출심사기능의 정상화 및 금융과 실물의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흐름의 왜곡시정문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금융자율화는 물가상승, 국제수지악화, 투자효율의 저하 및 산업경쟁력의 약화, 자금의 편중배분과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 금융산업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자율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자율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기존의 산업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저축수준과 무역수지적자하에서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실물부문의 팽창은 고금리를 초래하며 나아가 기업의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런데 특히 기업의 자금수요는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경직적 하도급체계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기업재무구조상 차입의존도 심화 등의 요인에 따라 금리에 대해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 경우 금리자율화에 따라 시장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자금수요에 변화가 없으므로 금리의 시장조절기능이 제약된다. 따라서 저축수준이 제고되고 국제수지흑자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경직성자금수요의 구조적요인을 개선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적노력을 금융자율화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수출지원의 산업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에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과도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 각 부처의 각종 경제·경영정보가 제공되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은 아울러 불건전 신용할당에서 비롯되어지는 자금흐름의 왜곡문제를 보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은 기존의 지시금융의 관행과 기능이 금융자율화의 방향으로 개선된 행태가 될 것이다.

(2) 시장실패의 교정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예금인출위험과 금융기관도산 가능성, 금융산업의 공공성 및 외부경제 등의 요인에 의해 시장실패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해 투자하려하지 않는 금융시장 정보생산활동에 있어 무임승차유인에 의해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의 가격이 아무런 정보도 반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며 이는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²⁸⁾이란 은행의 정보부족으로 모든 고객에게 균일한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우량고객은 보다 나은 자금원을 찾아 떠나고 비우량고객만 남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역선택은 결과적으로 위험의 증가

27) 이는 핀란드나 동남아·중남미제국의 금융자율화 실패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28) Stiglitz and Weiss (1981)

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이러한 비우량고객은 대출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를 감수하는 대신 그 자금을 성공확율이 낮으며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하는데 이를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라 한다. 이는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켜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은행이 고객의 상환능력을 선별하지 못할 경우 대출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담보에 의한 대출 등 불건전 자금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은 금융기관들의 부분적 지급준비제도와 은행간예금이나 대출인수단의 공동참여 등 금융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성에 의해 금융시장에서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한 금융기관의 부실은 예금인출사태를 불러와 도산으로 연결되고 이는 또한 전염효과(contagion effect)에 의해 연쇄반응적으로 전금융시장에 파급되어 나타날 수 있다.²⁹⁾

금융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경제는 금융산업의 정보축적이 통상 과도한 고정비용의 지출을 요하기 때문에 정보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 금융기관에서 생산된 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활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소비의 비배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한 은행의 도산이 다른 은행의 연쇄도산을 초래한다는 것도 외부경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경제는 개별경제주체의 유인과 금융경제전체의 유인간에 괴리를 야기시킴으로서 개별경제주체의 경제적선택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자율화하에서는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은 부분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금융지원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우선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각부처가 경제전반 및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은행의 금융자금의 배분에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정부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지원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공공성 내지 외부경제로 인한 비효율성 및 불안정성을 보정하기 위하여서 금융산업의 정보화를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활용 등과 같은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금융기능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동태적 비교우위의 확보

국제경쟁이 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현재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즉, 각국의 경제사정과 시장자율화의 정도에 따라 각국은 여러가지 형태로 보다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국가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동태적 비교우위의 확보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설비투자, 기술개발투자, 산업합리화투자, 인력개발투자 등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자율화가 진행되고 정책금융이 축소되면 이러한 투자자금의 배분은 시장실패에 따라 시장기능

29)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총론-, 1993.12. p.6.

에 의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적이기 때문에 고수익과 고위험의 투자계획보다는 저수입과 저위험의 투자계획을 선호함으로 위와같은 동태적 비교우위의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태적 비교우위의 확보에 대한 시장 실패는 구체적으로 첫째, 외부경제효과가 크며 위험도 동시에 큰 기술개발에 대한 대출, 둘째,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기간산업과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대출, 셋째, 불확실성은 크나 기대수익이 높은 유망중소기업과 첨단 산업에 대한 대출, 넷째, 산업합리화대상업종에 대한 대출에 대한 기피로 나타난다.³⁰⁾

따라서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한 산업구조고도화가 비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금융자율화하에서도 산업금융제도를 활용하여 설비투자·기술개발투자·인력개발투자 등 동태적비교우위의 확보를 위한 자금동원 및 배분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한계부문에 대한 지원

경제성장과정에서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은 상대적으로 투자의 한계효율이 낮은 부문의 자원이동을 제약하여 당해부문의 성장을 저지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부문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한계부문은 대체로 환경보호, 지역개발, 중소기업지원, 사회복지부문등으로 파악되어 질 수 있으며 이 또한 시장실패부문으로 금융산업 자율화에 따라 금융시장기능에 의해서는 자금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지원은 성장과정에서 심화된 부문간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종의 소득보조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문들은 장기거시적 관점에서 보아 외부경제효과가 커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문이다. 따라서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맞추어 국가의 후생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경제사회발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자율화 하에서도 산업금융지원제도의 활용이 요청되어진다.

V. 산업금융의 정책방향

1) 산업금융제도의 개편

(1) 산업금융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한국의 산업금융제도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정책수행의 중추적 수단으로 기능해 왔고, 또한 상당한 정도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할 수 있다.

30) 손상호, 금융자율화시대의 산업금융, 산업연구원, 1994. 4. p.123

첫째, 산업금융제도와 통화신용정책간의 상충문제이다. 한국의 산업금융제도는 그 재원을 상당 정도 중앙은행의 자동재할인제도에 의존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구조를 경직적으로 만들고 따라서 통화총량규제 중심의 통화신용정책을 제약하는 장애요인으로 기능했다³¹⁾. 이러한 사실은 <표 1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8> 한국은행의 재할인지원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한은상업어음 재할인(A)	예금은행 어음할인(B)	A/B (%)	한은무역 금융(C)	예금은행 ¹⁾ 무역금융(D)	C/D (%)
'70	15.9	37.8	42.1	42.2 ²⁾	55.8	75.6
'75	102.3	121.5	84.2	278.1 ³⁾	338.9	82.1
'80	297.4	744.2	40.0	1,291.3	1,720.8	75.0
'85	1,320.8	2,672.1	49.4	2,039.2	3,129.9	65.2
'86	1,291.9	2,916.1	44.3	1,972.2	3,444.5	56.0
'87	1,620.1	3,411.3	47.5	1,132.8	2,420.4	46.8
'88	1,862.1	4,475.6	41.6	526.6	1,201.6	43.8
'89	2,588.0	5,843.4	44.3	639.2	1,479.1	43.2
'90	3,819.6	7,725.1	49.4	891.9	2,061.4	43.3
'91	5,478.8	10,758.8	50.9	986.2	2,403.6	41.0

주: 1) 무역어음할인 포함

2) 선수출금융 원자재 생산 및 비축자금 수입금융 포함

3)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수출지원 산업금융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자동재할인에 의존하는 산업금융이 Pro-cyclical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산업금융지원 대상인 수출이 증가할수록 자동재할인 규모도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통화총량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금융제도와 금융자율화와의 상충문제이다. 우선, 대부분의 산업금융이 일정조건만 충족 되면 자동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용되므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에 관계없이 일괄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 상존하므로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이 제약되고 있다. 또한 산업금융 재원조달상의 문제로서, 재

31) 이러한 문제는 94년 들어 한국은행의 여신제도가 총액대출제로 전환됨으로써 점차 완화되리라고 예상된다. 한국은행 자금부, 총액대출제 시행방안, 1994.2. 참조

정자금의 비중은 미미한 반면 금융자금이 대부분을 부담함으로써 금융의 재정화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 또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셋째, 산업금융제도와 금융제도간의 상충문제이다. 산업금융을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함으로써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및 개발기관이 동질화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의 금융산업개편 논의와 관련한다면, 이것은 산업금융전담기관의 선정 및 신설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산업금융제도 자체의 비효율성문제이다.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다기한 산업금융 지원조치가 제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조건 또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산업금융제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산업금융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산업금융의 자금원과 용도 즉 산업금융의 원천과 운용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① 금융자금

우리나라 수출지원금융은 자금조달비용에서의 우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986년 이후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면서 지원대상을 축소시키고 지원금리를 일반대출금리에 접근시키는 등 보조금 요소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우량기업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덤벨안 14조에서 보조금의 크기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실세금리와 금융권의 대출금리와의 차이도 혜택으로 간주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금리가 완전자유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상의 혜택으로 인하여 보조금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³²⁾ 자금의 가용성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자금의 우선공급 또는 자금이용기회의 확보 등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실제 과거 미국의 우리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도 자금의 가용성에 대하여는 보조금여부 판정기준에서 제외된 바 있다. UR협상은 정부나 정부기관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소득 또는 가격지지와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작·간접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보조금 일체를 금지하고자 하므로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행 수출지원제도의 변화 및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산업설비금융의 경우도 UR협상의 보조금금지조항인 수출성과부 보조금에 해당되며 국산기계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도 금지보조금인 국산품사용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된다.

② 국민투자자금

예금은행의 국민투자자금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은 은행의 자금조달상 문제가 없고, 한은의 재할인 지원이 없어 통화관리에도 부담이 없으며, 자금의 용도가 국산기계 매입, 계획조선, 기술개발 등 중화학공업과 연불수출, 식량증산 등으로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크므로 그 증대가 요망되나, 1992년부터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되어 대출잔액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다.

32)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는 시장실세금리와 정책금리간에 금리차가 존재하고 있고 사채시장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실세금리를 년리 18-19%로 추산하고 있음), 저리의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의 우대, 이자율규제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③ 재정자금

1993년 말 현재 예금은행이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한 대출규모는 6조 4,369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금의 대출은 주로 특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리는 대부분 10% 이내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대출기간도 대부분 5--20년으로 일반금융자금대출보다 금리 및 기간면에서 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금 대출은 취급금융기관이 재정에서 낮은 금리로 대하받아 일정한 예대마진을 붙여 융자하는 것으로 은행이 자금조달상의 문제는 적은 대출제도이다.

④ 외화대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외화대출 자체가 계열기업군 여신관리규정상 한도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불가능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첨단시설재의 수입시에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화대출제도가 시설재 수입자금, 계획조선용 기자재 수입자금, 차관 및 외화대출의 상환자금 등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차관 및 외화대출 상환자금의 경우도 기업정상화가 필요한 대상기업에 국한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 및 입지면에서도 유리하여 시설재의 수입이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는 무역적자국이기에 수입시설재에 대한 첨단확인이 없이는 외화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편 기업의 기술료에 대한 외화대출 배제로 인해 기업의 기술개발이 위축될 수 있으며, 상환자금에 대한 외화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화대출제도는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제도이므로 일차적으로는 수입수요를 유발시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금리면에서도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이내에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마찰은 덜하다고 할 수 있다.

⑤ 단기수출지원금융

무역금융은 운용특성상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융자혜택이 부여되고, 한국은행의 재할인 지원으로 자금이 조달되어 일반은행의 융자시 무차별적으로 우량기업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수출실적에 따른 자금배분, 수입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차별 융자단가 적용 등으로 인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보조금여부와 관계없이 재원이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통해 지원되므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경직화시키고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수출실적에 따라 자동대출되는 현행 무역금융지원방식은 수출 호경기에는 자금공급이 확대되어 경기국면을 확대시키고 수출 불경기에는 자금공급이 축소되어 무역금융이 경기진폭을 확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무역금융 융자기준이 과거의 수출실적에 좌우되므로 수출실적이 좋은 우량기업은 혜택을 많이 받고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부진했으나 당해년도에 수출이 급증하거나 수출증대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 등 자금수요가 왕성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전년도 수출실적 일정액 이내 기업으로 한정되고 있어 무역금융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 수출실적을 일정액 이내로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2) 산업금융의 축소 및 효율화 방안

① 축소방안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과 금융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금융을 축소·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축소·정비해 나가야 할 산업금융범위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은행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자금, 중소기업관련자금, 산업합리화 관련자금 등이다. 둘째,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협조요청등에 의해 자체자금으로 취급하는 것들로 예를 들면 신발·섬유업계 지원자금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재정 및 기금자금지원에 의한 정책자금과 특수은행이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자금으로 취급하는 산업금융 등을 들 수 있다.

산업금융제도의 개편이 금융부문의 시장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 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시켜 산업금융의 축소범위와 단계별 추진방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i) 제 1 단계 추진방안

일반은행의 산업금융을 축소·정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을 일반금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이 자기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및 한국은행의 자동재할지원을 폐지하여야 하고 무역금융의 용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관련자금은 일반금융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 중소 소재·부품업체 운전자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자금은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이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담·취급한다. 일반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수출산업설비금융은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전담·취급한다. 일반은행이 민간기금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취급하고 있는 산업금융 및 이차보전자금은 특수은행으로 이관한다.

산업금융의 축소에 따라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상업은행재할인,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관련자금(A11)에 대한 자동재할인을 폐지하고 이 자금을 대상으로 은행별 재할인한도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자동재할인 대상이 아니면서 은행수지보전 등 특수한 목적으로 취급되어 현재 잔액관리 중인 산업구조 조정자금(A2), 산업합리화 관련자금(A16) 등은 은행의 수지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회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설비금융인 수출산업설비금융(A15) 및 에너지절약시설자금(A12)은 산업은행으로 이관한다. 또한 은행별 재할인총액한도제도의 완전이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재할인비율 및 재할인금리를 조정한다. 즉 현재 자동재할인방식이 유지되는 자기에 대한 재할인비율을 인하·조정한다. 그리고 현재 3-15%로 다기화되어 있는 재할인금리체계를 단순화하고 교환결제자금(B2)에 대하여는 시장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벌칙금리를 적용한다. 한국은행 대출금의 일부를 재정 또는 특수은행으로 이관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

가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되 한국은행이 이 국채를 인수하여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활용한다.

ii) 제 2 단계 추진방안

금리자유화가 거의 완결되는 이 단계에서는 일반은행의 산업금융을 완전히 폐지하는 한편 한국은행 재할인제도도 은행별 재할인총액한도제로 전환하고 재할인금리의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제고한다. 특수은행의 산업금융 취급방식은 지원대상만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원대상업체 및 여신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대출심사기능에 의거 은행이 독자적으로 하도록 한다. 종래에 수출산업, 중소기업부문 등 산업별·부문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생산성향상, 신기술개발, 고부가가치화 등 기능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

iii) 제 3 단계 추진방안

모든 금리가 완전자유화되는 이 단계에서는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의 진전으로 대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직접금융시장과 해외금융시장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금융시장에서의 초과자금수요가 해소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국내은행 차입여유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폐지한다.

② 효율화 방안

산업구조 및 조직의 균형적 발전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투자를 금융부문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금융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산업금융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살펴 보면 첫째, 산업금융의 공급방식이 정책금융으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나 산업금융시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종래의 특정산업중심의 지원체제에서 기능별 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경쟁제한 및 인허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기능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범산업적 지원체제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투자지원에 있어서 선별성을 강조하여 확장투자의 경우에는 업황, 장래성, 국제경쟁력 등을 근거로 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하며 합리화투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업성 검토결과를 중시하여 한시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은행에 대한 비자발적 긴급구제융자 강요사례를 지양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 등 직접지원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금융중 설비금융지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이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설비금융중 특히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한 부문은 정책금융기관이 전담토록 유도함으로써 예금은행의 자율성 제고와 설비금융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네째, 계열화 및 전문화를 통한 중소기업자체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체질의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금융부문에서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지원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물적 담보력부족의 문제를 해소키 위한 신용보완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A) 단기수출지원금융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통한 지원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경직화시키고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무역어음의 유통활성화나 재정에서의 지원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장을 부동산과 동일한 담보로 취급하여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이 제도를 계속 운용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통화중립적이고 비정책금융적인 무역어음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1992년 1월 금융기관의 CD발행자금에 의한 무역어음 할인액을 동 발행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재무부는 제 2금융권의 일부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무역어음편입비율을 확대하였다.<표 19참조>

<표19>실적배당금융상품의 무역어음 편입비율 확대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C M A (’92.1.10시행)	총운용자산의 10% (서울,부산소재사는 5%)이상	총운용자산의 20% (서울,부산소재사는 10%)이상
기업금전신탁 (’92.1.15시행)	통안증권, 재정증권, 외평채, 양곡증권 등의 편입액과 합하여 80%이상	무역어음 편입액만 10%이상
B M F (’92.1.22시행)		무역어음 편입의무비율 10%신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무역어음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우므로 현행 12%로 규제되고 있는 무역어음의 할인금리를 실세화하고 무역어음의 유동성증대를 위해 무역어음 전문딜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출실적에 따라 자동대출되는 현행 무역금융지원방식은 경기진폭을 확대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 지원방식을 수출 호경기에는 융자단가를 인하하고 수출 불경기에는 융자단가를 인상시키는 등 신축적으로 활용하여 무역금융의 경기조절 기능을 제고시킨다.

무역금융 융자기준이 과거의 수출실적에 좌우되므로 당해년도에 수출이 급증하거나 수출증대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 등 자금수요가 왕성한 기업들은 따라서 융자근거를 산정할 때 과거의 수출실적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B)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할인은 상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적 차원의 지원조치는 자금흐름을 왜곡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한은의 재할인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비율을 잠정인상하는 기간이 수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연장됨으로써 한은의 본원통화공급이 확대되고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뒤에는 본래의 지원비율로 환원하여 적용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상업어음 할인은 상거래에 부수하여 발행된 어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금의 회수가 비교적 확실

하고, 대출기간이 단기여서 자금의 회전률도 높은 편이며, 일반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우대도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어음 할인제도는 기업의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책금융이 주로 장기시설자금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금융과 다른 범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1992년말까지 금융기관 어음할인액의 각각 70%(비상장 중소기업), 60%(기타 중소기업)까지 한은이 재할인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재할인 지원을 장기적으로 점차 축소 폐지함으로써 일반금융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원통화의 공급과 직결되는 한국은행의 재할인 지원을 점차 축소해야 할 것이다.

C) 금융자금

금리가 완전자유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금융은 금리상의 혜택으로 인하여 보조금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리상의 보조금의 성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정책금리에 있어서도 최근의 금리자유화와 연결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차별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의 수출관련 정책금융에 있어 금리상의 우대는 금리자유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신용도에 따른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가용성의 확보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수출금융지원제도를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중립적이고 비정책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수출산업설비금융도 산업설비금융제도로 개편 통합하되 수출기업의 시설투자를 전제로 한 융자신청에 우선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설비금융지원규모 결정시에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연계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금융도입기준을 완화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들의 자금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대신 국내금융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용접근기회(accessibility)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에서 예외로 허용되고 있는 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UR보조금 협상에서 허용보조금으로 구분되고 있는 연구개발보조금과 지역개발보조금 성격을 가지는 수출지원금융이 개발 확대되어야 하겠다.

D) 각종기금 및 재정자금

은행의 자금조달상 문제가 없고, 통화관리에도 부담이 없으며,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크므로 그 재원을 계속 증대시켜 산업금융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금 대출은 은행이 자금조달상의 문제가 적은 대출제도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현행 예금은행의 금융자금을 통한 정책자금대출을 재정자금을 통한 대출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재정자금 대출이 대부분 농수산 등의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재정자금 대출을 제조업 등의 산업지원분야에 확대해야 할 것이다.

E) 외화대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경우는 첨단시설재의 수입시에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무역적자국의 경우 첨단확인이 없이는 외화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기

의 기술료에 대한 외화대출이 배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외화대출은 정부가 외화 대출자금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자금용도를 한정적으로 법에 열거하여 허용해 준 이상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도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술료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하도록 외화대출대상에 추가하고 기업합리화 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차입금 대환용으로 외화대출 차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역적자국에서의 수입을 유발하는 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술도입 등 수출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산업금융을 위한 금융시장 육성

장기설비자금은 산업금융제도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개발금융체제하에서 주요전략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장기설비자금의 공급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였으며, 양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설비자금공급방식은 문제점도 동시에 수반하였는데,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장기설비자금이 정책금융의 형태로 공급되었다는 점이다. 즉 장기자금시장을 형성하는 대출시장과 증권시장 중에서 증권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장기설비자금은 주로 대출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밖에 없었고, 이 대출시장은 정부의 규제아래에서 타율적 신용할당을 통해 경제개발계획의 전략부문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하였다. 그리고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은차입이나 외화자금에 의존함으로써 국내의 장기금융시장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장기설비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현재 한국의 주요 금융기관의 설비금융 지원내역은 < 표 20 > 과 같은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애초에 장기설비금융기관으로서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이외에도 특수은행이나 상업은행인 일반은행까지 장기설비금융기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개방의 추진과 동시에 요구되는 한국의 장기설비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 전문금융기관의 육성, 직접금융시장의 확대, 외화시장개방의 문제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직접금융시장의 육성

장기금융시장 중 자본시장은 직접금융시장으로서 주식이나 회사채를 통해 장기설비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의 자본시장은 70년대에 들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70년대에는 주로 은행보증회사채 중심의 채권시장의 규모가 증대했고, 80년대 중후반 이후 주식시장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규모가 급증했다.

한국에서 회사채시장은 은행보증회사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은행대출시장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채권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한국에서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간에 금융자산간의 대체성이 매우 낮고 오히려 동조화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회사채시장의 발전지체는 한국의 산업금융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채권시장에서의 채권등급평가가 시장

〈표 20〉 국민투자기금의 시설자금지원실적

지원 기관	재 원	지 원 자 금 종 류	
장기설비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일반원화자금	일반시설자금, 정책사업자금(기계국산화, 기술개발, 첨단산업, 자동화설비, 전원개발, 계획조선), 투자사업자금 등
		재정자금 및 기금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석유사업기금, 특별설비자금, 관광진흥기금, 공업발전기금, 특수산업육성기금, 에너지합리화기금자금 등
		외화자금	외화시설자금
	장기신용은행	일반원화자금	일반시설자금
		재정자금 및 기금	석유사업기금, 공업발전기금, 국민투자기금, 신기술기업화자금등
		외화자금	외화시설자금
특수은행	일반원화자금	일반시설자금,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시책특별자금(구조고도화 및 구조조정자금) 등	
	재정자금 및 기금	공업발전기금, 국민투자기금, 특별설비자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기술개발·정보화·공정개선·시설근대화), 산업기술향상자금 등	
	외화자금	외화시설자금	
예금은행	일반금융자금	일반시설자금	
	재정자금 및 기금	국민투자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특별설비자금, 수출산업설비자금,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석유사업기금자금등	
	외화자금	외화시설자금	
전은행의 신탁계정		신탁대출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	중장기 일반시설자금 및 외화대출, 외자도입알선	
	리스회사	장기 설비시설 대여	

자료: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1991.12.31, 474호, p.33에서 인용.

기능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시장기능을 통한 금리의 기간별 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이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등의 이유로 인해 금융자산으로서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증가가 제약되고 있고 따라서 회사채유통시장의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직접금융시장의 확대는 금융자율화가 추진되는 상황하에서 가능하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직접금융시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전문 장기설비금융기관의 육성

개발금융체제하에서 한국의 장기설비자금공급은 60년대에는 주로 개발기관(한국산업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70년대에 들어서는 예금은행의 설비자금공급비중이 산업은행의 설비자금공급비중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예금은행이 장기설비자금공급기관으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예금은행의 장기설비자금공급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예금은행의 설비자

금공급비중이 산업은행의 비중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그리고 개발기관이 장기설비자금공급기관으로 동질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특히 일반은행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낳는다. 첫째, 단기상업자금의 공급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상업은행으로서의 일반은행의 본래적 기능이 과도한 장기설비자금의 공급으로 인해 약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은행의 금융자금원천이 주로 단기성금융부채를 통해 조달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roll-over에 의한 단기자금의 장기설비자금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은행이 조성한 금융자금을 주로 산업금융의 형태로 장기설비자금으로 공급함으로써 일반은행 스스로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주도의 산업금융제도하에서 금융의 재정자금화경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금융자율화의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표 20>에서와 같이 장기설비자금의 취급기관과 지원세목이 지나치게 다기화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어서 장기설비자금공급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융자율화의 원칙아래에서 향후에 요구되는 장기설비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설비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장기금융시장과 장기설비자금 전문금융기관이 육성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설비자금전문금융기관의 재원은 재정으로부터 조달되던가 장기금융시장에서 조성된 금융자금을 국한시켜야 하며, 금리자유화를 통해 장·단기금리구조의 합리화를 제고시켜 장기설비자금전문금융기관의 금융자금조성이 시장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리의 기간별 구조의 확립은 장기설비자금전문금융기관이 대출재원을 장기금융시장의 금융부채에 대한 수요증가를 통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관건이 된다.

(3) 외화시장개방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외화자금은 장기설비자금의 주요한 공급경로로서 기능해 왔다. 즉 자본재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70년대까지는 차관의 형태가, 80년대 이후에는 외화대출의 형태가 한국의 장기설비자금의 주요공급경로였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외증권발행을 통한 외화자금의 도입이 시작됨으로써 외화자금공급경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의 금융시장개방의 추세 속에서는 외화형태의 장기설비자금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외화장기설비자금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고, 한국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을 확대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며, 민간기업의 해외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 국내 경제여건과 금융·외환·증권시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에 대한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도 조기에 자유화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해외활동을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제한도 완화한다. 외환집중제, 외환포지션관리, 실수요증명제도, 환율제도, 원화의 국제화,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자조달 및 운용도 완화한다.³³⁾

VI. 결 론

이상에서 금융자유화과정에서 있어 산업금융의 조정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자유화는 1980년대 이후 진행되었고 향후 수년간에 걸쳐 보다 가속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융산업에 있어 정부개입의 축소, 시장기능의 회복이라는 추세하에서 산업금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 본논문의 주된 과제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금융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은행대출시장에 있어서 산업금융은 정책금융의 일환으로써 제조업부문에 배분되어진 정책자금을 의미하며 그 성격에 따라 단기운영산업자금과 장기설비산업자금으로 대별되어진다. 그리고 산업금융을 자금조달개원별로 분류해보면 한국은행의 재할자금공급을 포함해서 금융자금에서 공급되어지는 산업자금, 재정자금에서 공급되어지는 산업자금, 국민투자기금 및 각종기금에서 공급되어지는 산업금융, 외화자금으로 조달된 산업자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지원목적별로 분류해 보면 기술개발지원 산업금융, 산업합리화지원 산업금융, 투자촉진지원 산업금융, 중소기업지원 산업금융, 수출지원산업금융과 에너지이용합리화, 환경오염방지, 직업훈련시설 설립을 위한 산업금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금융의 추이 및 각 산업에 대한 배분구조 및 산업별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기 위해 우선 산업별 은행대출자금의 공급비중을 집계해 보았다. 그 결과 예금은행의 경우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산업별 대출자금공급 비중이 변천해 가는 것을 볼수 있었고 이에 비해 산업은행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주로 중화학공업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자금공급에 주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은행대출설비자금의 산업별 효과에 관한 분석에서는 설비금융이 산출, 고용, 수출, 노동장비율 등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토지건물규모나, 수출, 산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산업금융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초기단계에 있어 전략부문에 우선적 자금공급을 통해 성장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계속되는 산업금융의 규모확대와 제도다양화에 따라 산업금융은 정부의 통화정책운영상의 불합리성, 산업간 배분에 있어 정책적인 자의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산업금융관리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전문성과 이에 따른 낭비적 요소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게 되었다. 이에 더해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율화 필요성의 확산, 경제발전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운용효율성의 확대 필요성의 증가, 금융개방 및 국제화에 따라 보조금적 성격의 산업금융지원의 철폐요구의 수용 등의 추세에 의하여 산업금융의 제도 및 형태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산업금융자금의 배분구조에 있어서는 산업자금중 설비자금의 공급행태가 각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은행대출자금중 설비자금의 산업별 배분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

33) 손상호, 금융자유화 시대의 산업금융, 산업연구원, 1994.4. p202~203

로 기업의 설비자금 수요행태와 은행의 설비자금공급행태방정식을 구성하여 계량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금융자유화과정에서 금융산업 및 경제전반의 안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화된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산업금융은 부분적으로 존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의 산업금융제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이 성숙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금융제도는 유지되어 금융자율화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금융자유화 이후에도 금융시장정보비대칭성의 해소, 동태적비교우위의 확보, 중소기업·지역개발·환경·복지부문 등 한계부문에 대한 지원 등 시장실패로 말미암아 자율적 금융시장기구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위해 산업금융제도가 활용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산업금융의 조정방향은 단기산업금융의 경우 전적으로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폐지하고 장기산업금융의 경우 산업구조고도화에 필요한 부문에만 존속시키되 그 운영을 효율화하며 기타 산업에 필요로 하는 장기설비자금의 공급은 직접금융시장 육성, 전문간접금융기관의 육성, 외화자금시장개방을 통한 자금조달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 총론, 1993. 12.
2. 김관수, 신용배분과 금융자율화의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85.12.
3. 김기해, '주요국의 금리정책 운용방식',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513 : 1991. 8, pp. 72-89
4. 김동원, 「1980년대 금융제도개혁의 요인과 성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8.
5. '금융자율화여건의 은행대출시장구조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37. 1, 1989, pp. 67-84
6. 김중용, '산업발전과 정책금융', 한국개발연구, 1986.3, pp.43-76.
7. 남상우·동원, '금융자율화의 과제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1.8.
8. 류덕위, '한국정책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전공대논문집, 7.2, 1990.12.
9. 민경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경제논집, 6 1990.6.
10. 박영귀, '서독의 산업금융제도',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373, 1987.10, pp.1-23.
11. D.C.콜, 박영철, 한국의 금융발전, 한국개발연구원, 1987.
12. 손상호, UR보조금, 금융자율화와 산업금융·세계의 개편방향, 산업연구원, 1992.
13. 금융자율화시대의 산업금융, 산업연구원, 1994.4.
14. 사공일, '금융과 경제발전', 한국개발연구, 가을호, 한국개발연구원, 1980
15. 심지홍, '신용시장의 수량할당과 효율적 신용계약', 산업연구, 대전대, 1991, pp. 170-171.
16. 이영세·이종호·김동환, 산업금융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KIET, 1989.
17. 전경련, 여신관리제도의 개편방안 1992.11.
18. 정건용, '우리나라 금융정책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7.7.
19. 정운찬,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1. 8.

20. 정운찬, 김홍범, '공금융시장과 사금융시장', 금융, 1982.11.
21. 정진근, '우리나라 통화금융정책의 문제점', 한림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1989.12.
22. 조희영, 금융제도론, 대영사, 1988. 9.
23. 하성근, 한국의 금융정책, 태진출판사, 서울, 1990. 8.
2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기업의 재무행태와 금융관행에 대한 연구, 1992. 12.
25.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 조사, 1993.
26.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운용관련규정집
27.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28.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29. 한국은행 자금부, 통화신용정책운용관련규정집, 1993.1.
30.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정책, 1977.12.
31.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의 장기자금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1986.
32. 재무부, 금융저축통계, 각년도.
33. Euh, Yoon-Dae, Amsden, Alice H., Korea's Financial Reform, 고려대경영논총 33, 1990.10.
34. Kim Joong-Woong, Financ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6.
35. Brimmer, A.F., 'Central Banking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Record of Innovation', J.M.C.B., 1971, pp.780-792.
36. Kane, E.J. & Malkiel, B.G., 'Bank Portfolio Allocation, Deposit Variability and the Availability Doctrine', Q.J.E., Feb., 1965, pp.113-134.
37. Kane, J.A., Development Banking, Lexington Books, 1975, pp.13-16.
38. Patrick, H.T.,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14, No.2, Jan. 1966, pp.174-177.
39. Penner, R.G. & Silber, W.L., 'The Interaction between Federal Credit Programs and the Impact on the Allocation of Credit', A.E.R., Vol.63, 1973, pp.838-852.
40. Rao, D.C. & Kaminow, I., 'Selective Credit Controls and Real Investment Mix :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J.F., Vol. 28, 1973, pp.1103-1118.
41. Rao, D.C., 'Selective Credit Policy : Is It Justified and Can It Work?', J.F., 1972, pp.473-475.
42. G.M.Von Fursternberg, "Financial Innovations in Developed Economies and Financial Refom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Reform, Korea Federation of Banks', 1985.9. pp. 8~10
43. Rimbara, Yukio, and Santomero, A.M., 'A Study of Credit Rationing in Japan', I.E.R., 17, Oct. 1976, pp.567-580
44. Ryder, H.E.Jr., 'Credit Risk and Credit Rationing : Comment', Q.J.E., Aug. 1962, pp.471-479.
45. Saulnier, R.J., "An Appraisal of Selective Credit Control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2, 1952, pp. 633-641.
46. Sealey, C.W.Jr., 'Credit Rationing in the Commercial Loan Market: Estimates of a Structural Model Under Conditions of Disequilibrium', Journal of Finance 34, June,

46 社會科學研究論叢 1995年 第 3 號

1979, pp.689-702

47. Shaw, E.S.,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 Press, 1973.

Silber, W.L., 'Selective Credit Policies : a Survey', *Banca Nazionale del Lavoro Quarterly Review*, Dec. 1973, pp.328-351.

48. 伊東和久 편,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금융, 아즈아경제연구소, 1983.

